

‘창립 20돌’ 맞은 전북겨레하나

‘평화의 한반도 이루는 그날까지’

‘스물, 평화로 날아’
주제 기념행사 개최
다름을 존중하는 정신
회복하는데 최선 강조
“남북관계 회복 등 위해
다시 힘 모을 것” 다짐

사단법인 전북겨레하나(이사장 김은경)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저녁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기념행사 ‘스물, 평화로 날아’를 열었다.

전북겨레 하나는 지난 20년간 인도적 대북 지원,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과 문화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지역 대표 평화·통일 시민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경 이사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김은경 이사장은 “전북겨레하나 20년 역사의 주인공은 늘 함께해준 회원과 시민들”이라며 감사사를 전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이루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후원이사회장(전북경영자총협회장) 역시 “지역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참여가 오늘을 만들었다”



사단법인 전북겨레하나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 저녁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기념행사 ‘스물, 평화로 날아’를 열 가운데, 김은경 이사장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겨레하나 제공)

며 힘을 보탤다. 축사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오늘의 기념식이 평화통일의 날갯짓이 전복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면 축사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에도 길을 열 멈추지 않았던 전북겨레하나의 실천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행사에서는 전북겨레하나를 창립해 20년 동안 지역 통일운동을 이끌

어온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소화가 특히 큰 관심을 모았다. 방 사무처장은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심장이 뛰는 동지였다”며 “그 시간이어말로 민주평통에서 새로운 여정을 펼치게 된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다름을 존중하는 정신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겨레하나는 초대 상임대표 이강실 목사를 비롯한 8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봤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청소년평화통일재단 1기 출신 유진솔 싱어송라이터의 공연, 전주YWCA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참석한 회원과 시민들은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통일의 대장정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만호 기자

“법원의 특검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거의 수사방해 수준”

민주 이성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법원의 특검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이 거의 수사방해 수준이라고 밝히며 내란 세력 단죄는 더디가만 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후 2시, 이성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대법원을 방문해,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서 철저히 밝히도록 요구했다.

그 후 내란 특검도 방문해서, 12월 3일 내란의 밤 사법부 심야회의 의록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일반 형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3%”라며 3대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은 어떻게 되는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특검은 구속영장 10건 청구했는데 법원이 9건 기각했다. 기각률이 무려 90%다”며 “이게 수



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또한,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12건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5건을 기각(기각률 41%)”이라며 “특검은 구속영장 24건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8건을 기각(기각률 33%)”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여야 할 법원이 내란 세력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내란 특검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내란 1년이 돼가도록 뭐하나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전면 재검토하라”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타지역 선정에 “공모 기준 위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부지 선정이 공모 기준을 스스로 위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모 지침에는 부지를 무상 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조건을 충족한 곳은 새만금이 유일함에도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광범위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정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법적 가능성을 근거로 평가해 공모 기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전북은 새만금특별법을 근거로 50년 임대 후 50년 경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부지 제공인을 제시했고, 전북특별자

치도와 군산시가 연구기관의 토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실효성 있는 준비를 외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북은 지난 2009년부터 16년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연구기관을 구축해 온 경험과 국가적 투자 노력을 축적해 왔지만, 이번 결정에서 이러한 성과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과기정통부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흔들릴 없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200억 추가 출연 요구… 시 보건행정 ‘난맥상’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 시 보건소 대상 행감서

“재정 여건·협약서 모호한 규정 고려 않고 추진”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5일 군산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200억원 추가 출연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부서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총분지 않은 재정 여건과 협약서의 모호한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설경민 의원은 “과거 협약서에 명시된 11% 분담률을 그대로 수용해, 재정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는 외면한 채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산시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북대병원을 위해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계획에는 500병상 규모에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호흡기 클리닉 등 특화 진료 기능이 포함돼 있으나, 협약서에는 ‘노

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문구만 담겨 있어 특성화 센터의 실제 설치 여부나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설 의원은 “보건행정과는 협약 이행 여부나 실질적 효과 검토보다 추가 출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출연 논의에 앞서 개원 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협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진료 가능과 차별성이 없다면 전북대병원 건립의 당위성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불거진 추가 출연 문제는 그동안 업무보고 등에서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해 온 사안으로, △사업 지연의 책임 소재 △전북대병원의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추진 방식 △군산시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재정부담 △구체적 의료서비스 계획 부재 등을 문제로 삼았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향후 집행부가 전북대병원과의 협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담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도의회 문안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

도민안전실 소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제도 기반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5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성수 의원(고창)은 방정 적립금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금을 두고, 뒤늦게 5배 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은 기금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악 추경’에서 큰 폭의 재원 확보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가급 적립금을 먼저 충실하고 그 이후 필요한 사업예산을 추경

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며 “기금은 도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만큼,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식 재원 보강을 반복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기금 적립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인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재정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재정지립도가 열악한 시·군

이 많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고 효과가 미비하며, 단순한 세미나나 행사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산 등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을 실제로 배정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내달 5일부터 지자체장 행사 참석 제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발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거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이 여는 미래와 하계올림픽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북서 포럼 개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탄녹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25일(화)에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이 여는 미래와 전주 하계올림픽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녹위 주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 릴레이 포럼’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중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사무차장과 노홍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 친환경 올림픽, △탄소중립 축제도시 프로젝트(친환경 축제의 도시 전북),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한국의 과제, △국내외 히트캠프 보급동향과 국내도입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사배원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단 유치총괄과장은 ‘탄소중립 친환경 올림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는 ‘기존 대회 대비 탄소발자국 100% 절감’임을 강조하며, 대회 운영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무공해 교통체계 운영, 탄소중립 목조경기장 등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유경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축제도시 프로젝트’를 주제로, 친환경 축제의 도시 전북으로서 전주 하계올림픽을 탄소중립 행사



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설명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하며, 글로벌 전력시장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이고,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히트캠프 보급동향과 국내도입 가능성’을 소개하고, 국내 히트캠프의 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으로 히트캠프 단계적 보급 계획수립, 건물 탈탄소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 후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가 주재한 토론에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에너지산업육성단장, △프라테코 모이름드리 대표, △전북연구원 정은천 연구위원과, 최경식 부산시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시·도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